

여야 연금개혁안 공방... “21대서 모수개혁부터”

김진표, 22대는 ‘구조개혁’ 제안
“민주 단독처리 안돼, 특위 합의”
여야 합의시 ‘원포인트 본회의’
대통령실 “22대서 논의를” 반대

여야가 연금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들 중 모수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완수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보다 중요하다”며 “합의가 돼 있는 범

위 내에서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8개월동안 20억원에 가까운 국회 예산을 들여 공론화 작업을 해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을 봤고 여야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며 “이 정도면 타결될 것으로 봤는데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하루 856억원, 매월 2조6000억원, 매년 30조8000억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야가 보험료를 인상에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을 두고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데 대해,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선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차단했다.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연금개

혁특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특위가 합의를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를 거칠 수 있다”며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국회는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본회의에 그 법안을 상정할 방법이 없다. 특위에서 의결하는 게 대안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수에 대해 합의하면 28일 외 27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는 질문에는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22대 국회에서 중

실히 논의해 추진하는게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거론해온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수용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의 제안은 소득대체율 43%라고 맞서면서, 며칠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성일종 ‘VIP격노 죄 아냐’ 발언에 “이쯤되면 자백”

“여당 민심 역주행·한심한 오독”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냐고 말한 데 대해 “이쯤 되면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서면브리핑에서 “화 좀 낸 게 대수냐며 적반하장”이라며 “여당의 민심 역주행과 한심한 오독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 지도부의 대통령 심기 경호 인사는 수사조차 대통령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국정 혼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격노하면 수사 결과가 바뀌고 회수돼도 되는 것이냐”며 “스무 살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실보다 VIP의 기분이 더 중요하냐”고 따져 물었다.

또 “검사 시절에도 기분에 따라 수사를 좌지우지했던 것이냐”며 “성 의원은 한 사람의 심기는 경호했는지 모르지만 온 국민의 심기를 격노케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대통령 본인을 위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건 아닌지 묻고 있다”며 “자신의 기분 때문에 수사 방향을 꺾고,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숨기려 수사에 개입하고, 자기를 지키려 특검을 거부했다면 분노는 이 정권에 대한 응징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방향을 바꾸었다면 그 격노는 죄다. 여당은 적반하장과 몰상식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격노케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세봉 모내기 부모와 함께 나온 어린이 등이 지난 25일 광주 북구 일곡동 한세봉농업생태공원에서 손모내기를 하고 있다. 한세봉 개구리 눈은 동네 주민들이 공동경작으로 꾸러가는 도심 속 생태환경보전 지역이다. 김양배 기자

민주 “채상병 특검 ... 국힘 찬성 6명 가량 더 있다”

박주민 “법무부 제기, 근거 없다”
28일 투표서 찬성표 추가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기한 문제점을 반박하면서 여당 내 ‘숨은 특검 찬성표’가 더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 규명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가 제기한 채상병 특검법의 문제점 네 가지 사항을 다 합리적으로 지양하고 허위”라고 반박했다.

박 단장은 “법무부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이야기했던 대국민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점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A4용지 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수사 대상 의혹 중 일부를 야당이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아무런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대비해서) 국회 패스트트랙이 제도가 마련된 것이고 적법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근혜·최순실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경

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바 있다”라며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때 최순실 씨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현재는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는 문제가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수사력과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그는 “공수처가 워낙 작은 규모의 수사기관이다 보니 지금 당장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고, 지금 당장은 국회 입법논의를 존중한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8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여당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광주시당 “채상병 특검법, 국민의 준엄한 명령”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당선인(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전진숙·정준호·박권택·민형배)과 선출직 공직자, 핵심당원 등 300여명은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규탄대회는 김규현 해병대 예비역 발언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 정당별(진보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정의당·더불어민주당) 릴레이 발언, 피켓팅,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채상병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면서 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하는 윤 정권을 향한 성토를 쏟아냈다.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범인임을 자인한 셈이다”면서 “국민의 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은 존재할 이유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상병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면서 “민주당은 채 상병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광주시의회, ‘제83회 학생 모의의회’ 개최

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송광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83회 광주시의회 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의는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고, 학생들에게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

학생들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대기오염의 문제원인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고, ‘송광중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전자 투표로 의결했다.

의장을 맡은 황사량 학생은 “이번 모의의회 체험이 소중한 경험이 됐으며, 의회란 리더십과 의사소통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2005년부터 광주 시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추천받아 학생 모의의회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총 83회 8300여명이 체험했으며, 연말에는 모의의회 참가 학생들의 우수 체험수기에 대한 시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윤 “의대 증원·대입 준비 만전... 예산 편성도 힘쓰길”

윤 대통령이 27년만의 의과대학 증원 확정에 교육부에 대학입학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재정 당국은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운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 증원 확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성 실장은 “27년만에 처음으로 전국의 대정원이 1509명 증원돼 오는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며 최종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할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또한 교육부에 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연구개발(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선욱 기자